

멈춰진 톱니바퀴에서 빛나는 생태계 회로로: 강릉 사회연대경제 도약 전략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및 시행령 완벽 해독을 통한
지역 생태계 전면 재건 청사진

발표자: 권상동 / 협동조합 해봄 / 사단법인 우리마을
fb.com/isanbada | isanbada@gmail.com / 2026년 10월

13년의 기다림, 분절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엔진을 달다

파편화된 개별법 중심의 쪼개기 지원이 종료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생태계 육성 패러다임으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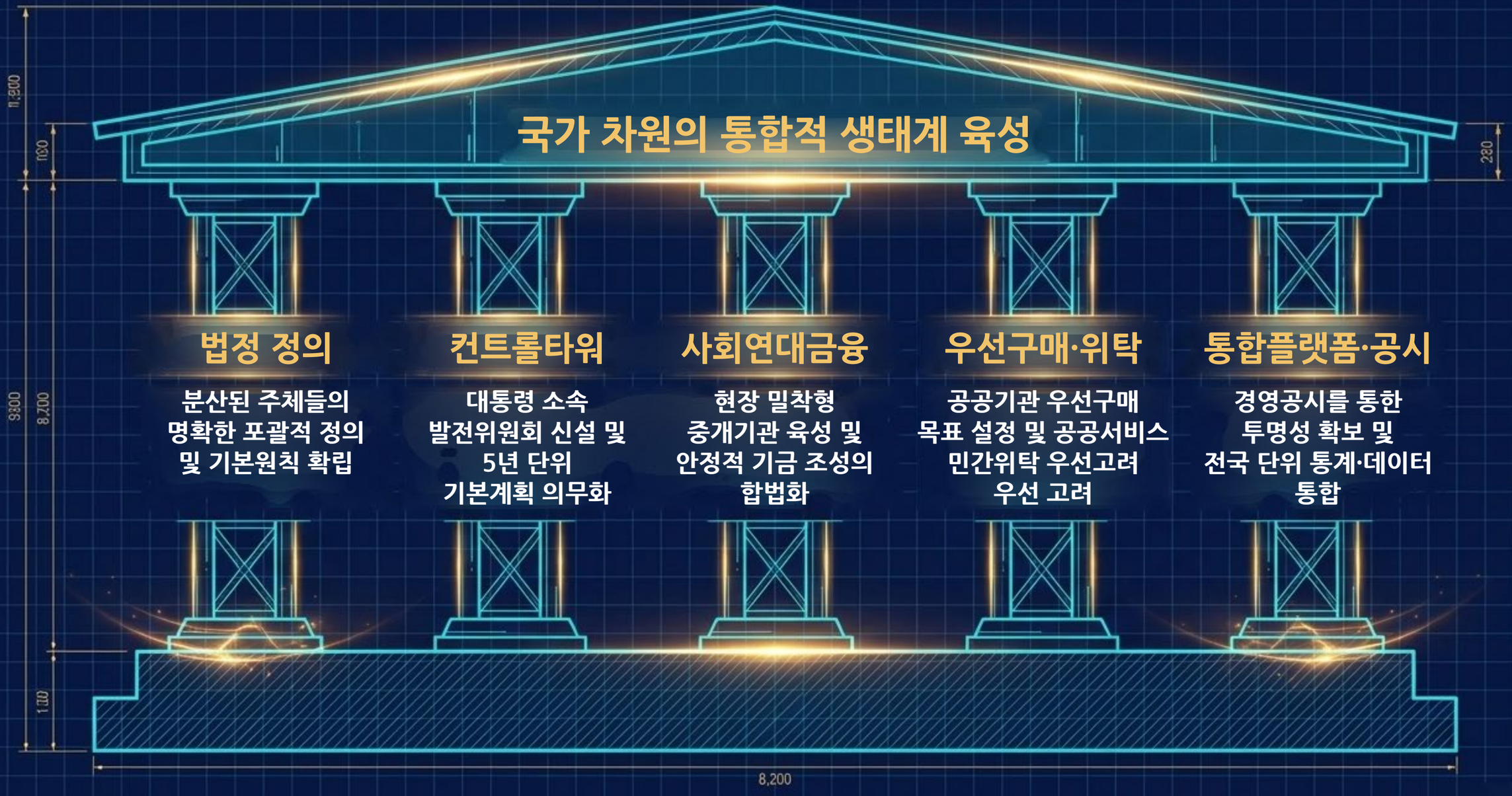
과거: 파편화된 시대



미래: 통합의 엔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떠받치는 5대 핵심 기둥



법정 정의

분산된 주체들의
명확한 포괄적 정의
및 기본원칙 확립

컨트롤타워

대통령 소속
발전위원회 신설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의무화

사회연대금융

현장 밀착형
중개기관 육성 및
안정적 기금 조성의
합법화

우선구매·위탁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설정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우선고려
우선 고려

통합플랫폼·공시

경영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전국 단위 통계·데이터
통합

게임의 디테일은 '시행령'이 결정한다: 현장의 룰(Rule)을 세팅할 골든타임



뼈대는 완성되었으나,
실질적 작동 원리인 **30개 핵심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언어**로
세부 기준을 설계해야만
빈 껍데기 법령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실무안을 마련하는 지금이
생태계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입니다.

[시행령 해부 1/3] 조직·지정·기본계획(항목 1~7)

누가 사회연대경제의 주체이며, 어떻게 판을 까는가?

분류	항목 연번	핵심 질문	위임 내용 및 쟁점
조직/지정	연번 1~3	지원조직의 자격과 지정 절차는?	지원조직 자격 요건 확정. 민간 자발적 연대·협력 네트워크(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조직 포함 여부 및 위탁 근거.
기본/시행계획	연번 4~5	정책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제출 방식.
거버넌스	연번 6~7	위원회 심의 대상의 무게는?	발전위원회 구성 및 '중요 사항' 변경 시 심의 기준 확립.

[시행령 해부 2/3] 거버넌스·금융·우선구매 (항목 8~21)

자본(금융)과 시장(구매)은 어떻게 순환하는가?

분류	항목 연번	핵심 질문	위임 내용 및 현장 요구 쟁점
민간 참여	연번 8~10	거버넌스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발전위원회 내 민간위원 과반 구성 원칙 보장 여부 및 지역위원회·지원센터 설립 기준.
사회연대금융	연번 11~17	현장 조직도 금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중개기관 진입 문턱 완화 쟁점 — 자본금 3,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 요망, 협동조합 출자금 및 비영리법인 출연금 인정. 전담기관의 민간 개방.
우선구매/계약	연번 18~21	공공시장의 파이는 얼마나 커지는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비율 명문화 — 초기 3% 이상 설정 후 장기적 5% 확대 제안. 대상에 '공사(Construction)' 포함 여부 및 수의계약 기준.

[시행령 해부 3/3] 시설·위탁·공시·권한위임 (항목 22~30)

생태계의 인프라와 투명성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분류	항목 연번	핵심 질문	위임 내용 및 쟁점
공유재산/위탁	연번 22~25	지역 자산과 서비스의 접근성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최대 50~100% 감면 근거.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사회책임형 책임 위임 범위.
경영공시/데이터	연번 26~29	투명성 증명을 위한 행정 부담은 적절한가?	의무 공시 대상 임계치 설정 — 소규모 영세 조직 서류 부담 방지를 위해 상시근로자 10인 또는 연매출 5억 이상 등 단계적 도입. 통합플랫폼 API 개방.
권한 위임	연번 30	지방정부의 자율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및 민간 전문기관 위임·위탁 범위 설정.

하위법령 제정의 핵심 쟁점: 자율성과 규제의 시각적 저울

시행령은 현장의 역동성을 살리되,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깨지 않는 정밀한 저울질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자율성 (유연성)

[급부행정 - 지원/우선구매]
문턱은 유연하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역량과 발전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행정의 실행력 (수용성)

[침해행정 - 지정취소/제한]
기준은 엄격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시행령에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규정.

강릉 현장 진단: 관료화의 늪에 빠져 멈춰버린 생태계 엔진



1. 행정 하위조직화

통계와 데이터 없이 중앙 부처 정책을 수동적으로 흉내 내는 행정 중심 업무보고.

2. 서류작업 매몰

단순 행정 서류작업의 무한 반복으로 현장 밀착형 인재 성장 및 발굴 불가능.

3. 네트워크의 붕괴

민간 자율성이 훼손되며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자발적 협의체 기능 정지 및 개별 기업 각자도생 상태.

훌륭한 무기(기본법)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쥐어야 할 강릉의 손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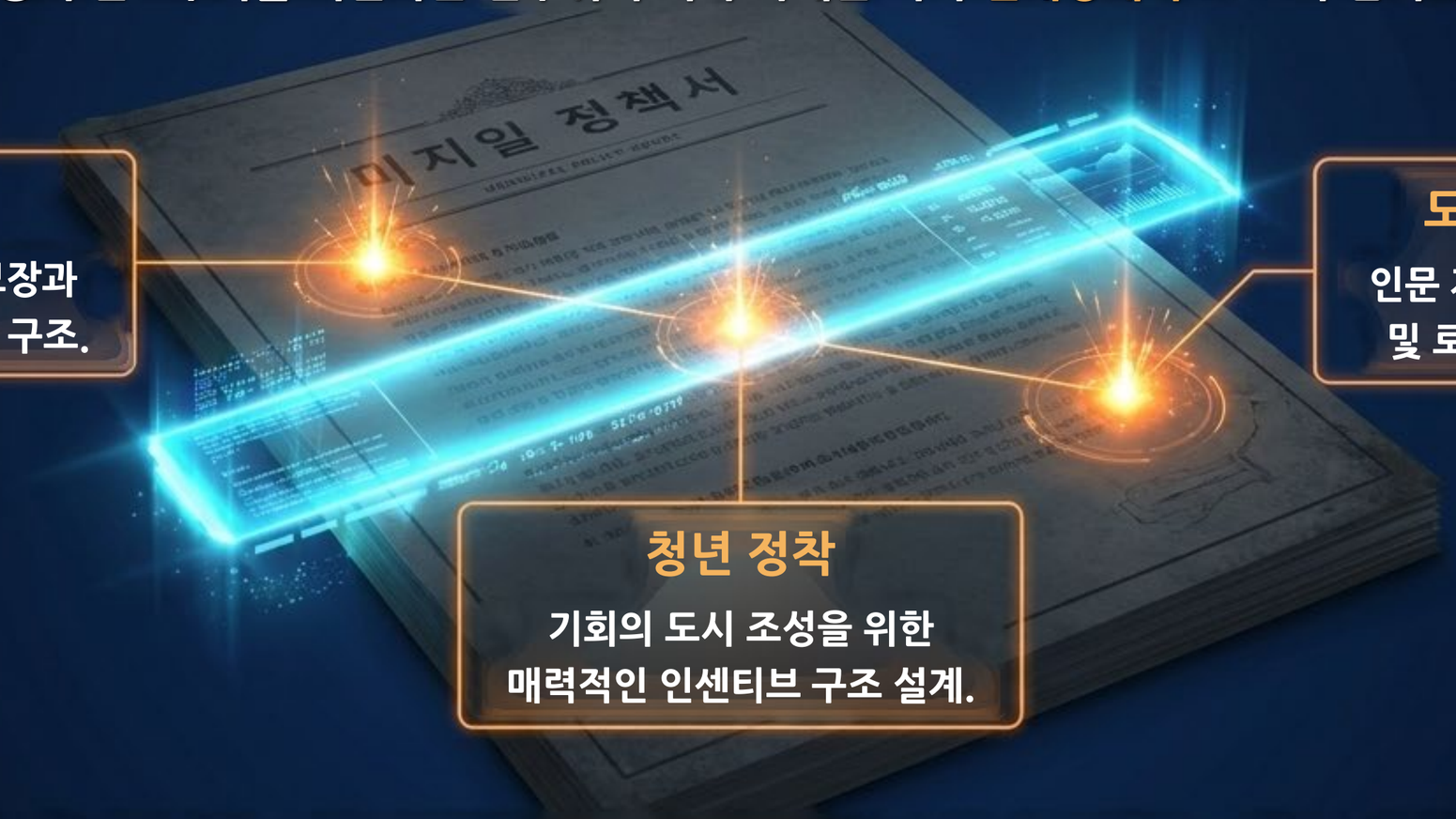
붕괴된 중간지원조직: 파트너인가, 행정 하청업체인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 / 문화·관광 기관
인력: 센터장 1명 + 대리 1명 (극소수)	**인력:** 없음 (소멸)	**인력:** 행정 직영 중심 (소수 인력 병목)
상태: 진흥원 위탁 후 최저 예산으로 관료화. 상담/창업/네트워킹 등 생태계 연결을 위한 핵심에 제역할 불능.	**상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흡수·통합된 후 고유의 공동체 밀착 지원 기능이 완전 소멸됨.	**상태:** 정책·연구 기능이 전무하며 행정 하위조직으로 소모됨. 관광공사와 문화재단 역시 창의적 자율성 훼손.

결론: 중간지원조직이 정책을 기획하지 못하고 행정의 말단 하위조직으로 소모되는 구조적 한계.

민선 9기 인수위원회 보고서 진단: 분산된 정책 속 '연대경제의 싹' 발굴

명시적인 '사회연대경제 단독 공약'은 부재합니다.
그러나 수동적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인수위의 시각 속에는 이미 연대경제의 DNA가 심어져 있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도심/농어촌 선순환 구조.

청년 정착
기회의 도시 조성을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구조 설계.

도시재생 & 문화
인문 자산 기반 창작 생태계
및 로컬 크리에이터 연대.

이 분산된 '싹'들을 하나의 사회연대경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도약 전략 1. 패러다임 시프트: '기업 낱개 지원'에서 '지역문제 해결 생태계'로

과거 (기업 중심)



미래 (문제 해결 중심)



미션 중심 전환

개별 기업의 인증과 육성에
매몰되는 방식을 폐기.

강릉의 핵심 과제 타겟팅

초고령 돌봄 대란, 빈집 및 구도심 침체,
청년 유출, 지역에너지 자립 등 강릉의 절박한
문제를 생태계의 미션으로 재정의.

연대와 컨소시엄

업종 간 장벽을 허물고 공동수주,
공동물류가 가능한 연대체를 육성하여
공공조달 시장(5%)에 진입.

도약 전략 2. 중간지원조직 정체성 전면 재정립: 행정 하청에서 '정책 파트너'로



독립성과 자율성 회복 (Escape)

행정 하청업체 역할에서 탈피.
단순 서류 수탁 기관이 아닌
민관 협치의 독립적 컨토워 기능 복원.

정책·연구 기획 집단화 (Elevate)

단순 행사 대행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 자원을 매칭하는
'전문 기획 파트너'로 격상.

예산·인력 현실화 (Empower)

최소 인력/최저 예산 구조 타파.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찾고
연결하며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자원 배분.

도약 전략 3. 정책·데이터 기반 획기적 강화: 통계가 없으면 생태계도 없다

흉내 내기식 행정을 멈추려면, 정확한 진단과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1. 공공조달·위탁 데이터 전수조사

강릉시와 산하기관의 구매/위탁 데이터를 맵핑하여
지역 연대기업이 진입 가능한 '시장' 선제파악.

2. 통계·실태조사 기반 구축

강릉다운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확한 기초 데이터 확보.

3. Social Impact 성과 측정

단순 매출액이나 고용 인원(숫자)을 넘어,
지역문제 해결(돌봄, 재생 등)에 기여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하는 지표 도입.



도약 전략 4. 인재 중심 선순환 구조 구축 및 민간 네트워크 재건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다시 지역을 살립니다.

서류 밖으로의 탈출

서류작업에 갇힌 인재들을 해방시켜
실전 프로젝트 경험 중심의
양성 체계로 전환.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재건

각자도생으로 고립되어 기능이
정지된 민간 자발적 네트워크의
심폐소생 지원.

자생적 협치

행정 주도가 아닌, 훈련된 민간
인재들이 스스로 생태계를 주도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 이양.

국가 종합계획과의 완벽한 매칭: 4대 선도모델 선점 전략



강릉이 **'지역문제 해결 역량'**으로 무장할 때,

정부의 예산과 사회연대금융은 자연스럽게 강릉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강릉의 대전환 (Before & After): 파편화와 고립에서 연결과 순환으로

기존: 파편화와 고립	도약: 연결과 순환
[거버넌스] 부서별 쪼개기식 개별 지원 (행정 하위조직)	[거버넌스] 시장 직속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및 파트너형 통합지원센터.
[자금/자본] 1회성 소모성 보조금 의존 (공공 의존)	[자금/자본] 3천만원 요건 완화된 사회연대금융 기금 조성 및 현장 중개기관 매칭.
[시장/판로] 개별 기업 단위의 치열한 각자도생	[시장/판로] 3~5% 우선구매 의무화 및 컨소시엄 기반 대규모 공공서비스 위탁.
[목표/성과] 양적 팽창 (인증 기업 개수 늘리기 서류작업)	[목표/성과] 질적 성장 (소셜 임팩트 데이터를 증명하는 '지역문제 해결형' 육성)

실행 로드맵: 2027년 3월은 '출발일'이 아니라 '준비 완료일'입니다



설계도는 주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생태계를 건설합시다.

법과 시행령은 강력한 도구일 뿐,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강릉의 사람과 연대**입니다.

13년의 척박한 환경을 버텨낸 현장의 힘으로,
마비된 행정을 깨우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빛나는 생태계 회로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강릉의 위기가 곧 우리의 무대입니다.